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2월 8일
ISSN 1976-0507 Vol. 4 No. 2

국제사회의 아이티 지진 피해 지원 현황과 시사점



정 지 선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 전문연구원 (jsjeong@kiep.go.kr, Tel: 3460-1078)
박 수 경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 연구원 (skpark@kiep.go.kr, Tel: 3460-1074)

- ▣ 아이티 지진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긴급구호에서 재건복구로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인 사회 안정과 경제재건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 UN이 긴급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요청한 5억 7,695만 달러 중 83% 정도가 조달된 가운데, 2010년 1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아이티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위해 공여국 회의가 개최됨.
- ▣ 오랜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빈번한 자연 재해로 정치·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아이티의 중장기적 개발과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공조와 지원이 필요함.

 - 아이티 정부의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고 주요작물 수출확대 지원,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경제취약성을 개선하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차례의 여진과 허리케인에 대한 국가, 지역사회 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재난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구축(building back better)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OECD/DAC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원조 예산 확대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08년 ODA 8억 달러 중 3%인 2,370만 달러를 인도적 원조로 공여하여 총 ODA에서 차지하는 인도적 원조 비율이 OECD/DAC 회원국 평균 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아이티 지진에 대해서는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 긴급구호와 재건복구, 개발사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아이티 정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머리말

- 지난 1월 12일 아이티에서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7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진도 7.0의 지진으로 약 17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함.¹⁾
 - 이번 지진으로 대통령궁을 포함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건물이 심하게 파괴되었으며 도로, 전기, 물 공급, 통신시설 등 인프라 피해도 심함.
 - 포르토프랭스에는 전체 국민 900만 명 중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물이 지진에 대한 내구성이 취약하여 피해가 더욱 커짐.
- 아이티 정부는 매몰자의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1월 25일 인명수색과 구조 활동을 중단하고 재건복구 단계로 이행하겠다고 발표함.
 -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빈국인 아이티는 지진 이전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황이었음.
 - 아이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노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1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아이티 지진참사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위한 공여국 회의가 열림.
- 이번 아이티 지진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최빈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 아이티는 오랜 식민지 역사와 정치적 갈등이 낳은 경제파탄, 사회불안과 빈번한 가뭄, 허리케인의 피해로 이번 지진 이전부터 이미 중남미의 대표적인 취약국가로 일컬어짐.
 - 이번 지진 지원을 통해 미국, 프랑스 등 과거 식민지 종주국과 주변 중남미국 간에 영향력 확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아이티에 대한 국제사회,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성공적인 재건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아이티 지원을 통해 올해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이 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1) "UNOCHA Haiti Situation Report No. 4"(1월 27일자)에 따르면 아이티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수를 80만~100만 명으로 추산함.

- 재난위험감소(DRR: Disaster Risk Reduction), 긴급구호와 재건·개발의 연계(LRRD: Links between relief, recovery and development) 등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도적 지원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지원 현황

- 국제사회는 아이티 지원을 위해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을 펼쳐 현재까지 40여 개국 1,700여 명의 구호대가 인명구조, 수색활동을 벌였음.
 - 현재까지 약 60만 명이 식량배급을 받았고 4만여 개의 텐트가 보급되었으며 133개 지역의 46만 명에게 식수가 지급되었으나 아직 수요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UN 인도적 지원조정실(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사무국은 1월 15일 국제사회에 아이티에 대한 5억 7,695만 달러 규모의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s)함.²⁾
 - 많은 공여국,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월 3일 현재 요청 금액의 83%에 달하는 4억 7,900만 달러 정도를 모금하였음.

표 1. UN 긴급지원요청 부문별 요청액과 모금 현황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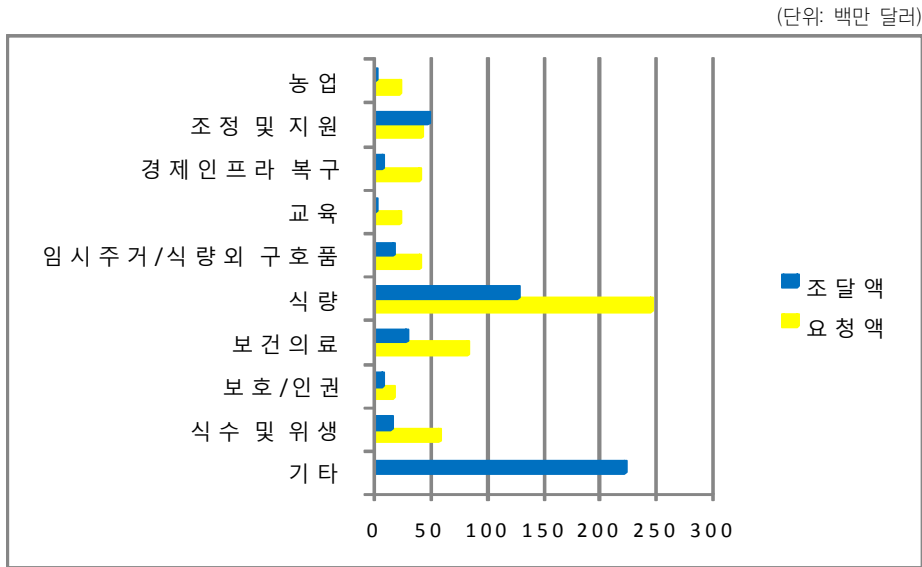
부문	요청액	조달액	조달비중	부족액
농업	23,000	1,750	8	21,250
조정 및 지원	42,389	47,435	112	-5,046
경제인프라 복구	41,219	7,272	18	33,947
교육	23,050	779	3	22,271
임시주거/식량외 구호품	39,686	18,074	47	20,612
식량	246,039	128,175	52	117,864
보건의료	83,345	28,392	34	54,953
보호/인권	16,589	8,195	49	8,394
치안질서	3,810	240	6	3,570
식수 및 위생	58,825	16,106	27	42,719
기타	-	223,080	-	-223,080
전체	576,952	479,498	83	97,454

자료: UNOCHA Relief web(2010.2.3), Haiti Flash Appeal 2010 status 통계자료.

2) 'Flash Appeal'은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UN 및 그 외 인도적 지원기구들이 공동으로 긴급한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임.

- 금액상으로는 많은 모금이 이루어졌으나 조정, 보호 및 인권, 임시주거 및 구호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수요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함.
- 특히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식량 수요에 비해 지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구호품 등의 배급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그림 1. UN 긴급지원요청 부문별 수요와 지원금액 비교



주: 노란색 막대는 요청금액, 파란색 막대는 지원 금액+공약액을 의미함.
 자료: UNOCHA Relief web(2010,2,3), Haiti Flash Appeal 2010 status 통계자료.

- UN 긴급지원요청에 대해 국가별로는 미국이 2월 3일 현재 약 1억 달러(전체 지원액의 약 23.8%)를 지원하여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민간기금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지원규모도 상당하여 전체의 11.7%를 차지하는 5,628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UN 긴급지원요청에 대해 120만 달러(전체 지원액의 약 0.25%)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표 2. UN 긴급지원요청에 대한 국별 지원 현황

(단위: 천 달러, %)

공여국/기관	지원액	비중
미국	114,078	23.8
캐나다	57,081	11.9
민간기금 및 NGO	56,285	11.7

표 2. 계속

공여국/기관	지원액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50,000	10.4
스페인	41,893	8.7
CERF	27,877	5.8
일본	22,418	4.7
스웨덴	18,233	3.8
프랑스	16,883	3.5
노르웨이	12,738	2.7
덴마크	10,665	2.2
독일	6,494	1.4
호주	6,385	1.3
브라질	5,486	1.1
영국	5,343	1.1
이탈리아	3,351	0.7
나이지리아	1,500	0.3
한국	1,200	0.25

주: 1)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UN 중앙긴급대응기금)

2) UN기구로부터의 이월액 등은 제외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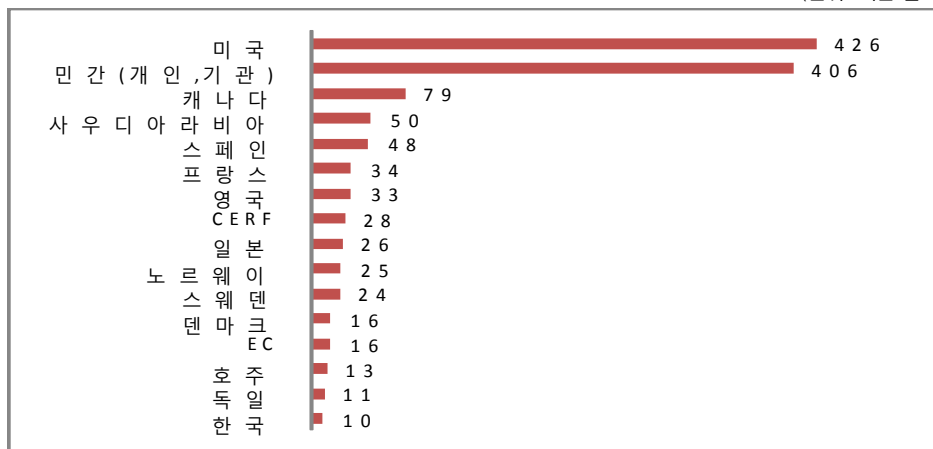
자료: UNOCHA Relief web(2010,2,3), Haiti Flash Appeal 2010 status 통계자료.

■ 한편 UN 긴급구호요청에 대한 지원액을 포함, 현재까지 집계된 아이티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총 13억 달러 규모임.

- 국가별로는 미국이 4억 2,6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약속 하였고 우리나라는 UN 긴급지원요청 자금 120만 달러를 포함, 전체 지원액 중 0.8%에 달하는 1,000만 달러를 긴급구호, 재건복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함.³⁾

그림 2.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에 대한 국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OCHA, Relief web(2010,2,3), Haiti: Total Humanitarian Assistance per donor.

3) 다른 공여국, 국제기구의 경우 구체적인 재건복구 지원규모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별 인도적 지원금액의 일괄적인 비교는 아직 시기상조임.

- 민간부문에서는 국제적십자사, 국경없는 의사회, Oxfam 등 국제NGO를 통한 현장구호 활동과 클린턴 재단(Clinton Bush Haiti Fund) 등의 모금을 통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지진 이전부터 아이티에서 활발한 지원활동을 수행해 온 국제NGO와 국제적십자사는 지진 발생 직후 풍부한 현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침.

나.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 UN 산하의 인도적자원조정실(UNOCHA)과 재난평가조정단(UNDAC: 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이 공여국 및 기관 간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OCHA는 긴급재난 또는 분쟁 상황에서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원기관 간 활동을 조정하는 UN 기구임.
- UNDAC은 긴급구호 전문가 네트워크로 재난 직후 현지에 급파되어 피해 정도, 대응상황과 역량, 국제 지원 수요를 파악한 후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을 지원함.
- 각 부문별로 UN 산하 전문기구의 주도하에 구호 및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12개 부문별로 주도기관(lead agencies)과 NGO, UN기구, 아이티 정부기관 및 국제개발은행 등이 팀을 이루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함.

표 3. 부문별 주요 복구사업

부문	사업내용
조기복구(UNDP)	Cash-for-work 방식의 건물 잔해 제거작업을 통한 긴급 고용창출 및 생계지원
난민촌 관리(국제이주기구)	노동집약적 긴급 공공 건설을 통한 수입제공
교육(UNICEF, Save the Children)	임시학교 건립,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아동의 사회심리학적 지원교육
임시거주지 및 비식량 구호품 (국제이주기구)	임시거주지 설치 및 여성성폭력 방지 등 안전 확보, 긴급생활용품 공급
보건(세계보건기구)	전염병 예방, 외상 및 심리치료,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
수송(세계식량기구)	긴급구호 물자의 원활한 이동경로 확보 및 대체 수송수단 확보
보호(UN인권고등판무관실)	이산가족 확인, 부모 상실 아동 및 청소년, 취약계층 보호
식수·위생(UNICEF)	안전한 식수공급, 화장실·공중 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

주: () 안은 해당부문에서 전체 참여기관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는 주도기관.
 자료: UNOCHA.

- 인명 구조 활동이 1월 23일 공식적으로 마감되면서, 현재는 의료서비스 지원, 식수공급과 위생시설, 식량배급, 임시거주지 설치 등 생존자 및 부상자를 위한 기초서비스가 시급함.
- 폐기물 처리와 수송로 확보, 통신장비 설치 등 구호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우선순위가 높음.
- 지진에 따른 건물의 매몰로 인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이번 지진으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⁴⁾
- 특히 피해인구 중 5세 미만 아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산되어 유아 및 아동의 보호, 정신적 충격 완화, 영양공급 문제가 시급함.

다. 원조 공여국 회의의 성과

- 1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14개 공여국, 8개 국제기구, 6개 NGO 대표들의 참석 하에 아이티 재건복구를 위한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됨.
- 국제사회는 향후 10년에 걸친 아이티 중장기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동의함.
- 2월 8일부터 세계은행, 중남미개발은행, UNDP, EC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 후 수요조사단(PDNA: Post Disaster Needs Assessment)을 파견할 예정임.
- 장 막스 벨리브 아이티 총리는 아이티 정부가 여러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재건복구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함.
- 국제사회의 도움이 아직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티 정부는 리더십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인도적 지원, 주택, 치안 등 주요부문을 담당하는 개별 정부 그룹을 조직하였다고 밝힘.
- 각 그룹은 아이티의 부처별 장관이 총괄하며 국제기구,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복구 활동을 수행할 계획임.
- 아이티 정부는 주택보급, 학교 및 병원 재건 등 지역사회 재건복구를 위해 총 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공여국은 구체적인 재건복구 지원 액수 및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음.

4) 영국 Guardian지(1월 21일자 기사), "Haiti earthquake creating a generation of amputees, doctors warn."

- 공여국들은 아이티 정부의 재건복구 사업 추진 역량과 투명한 자금집행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
- 아울러 중장기적 재건복구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여국들은 구체적인 지원액수 발표를 미루고 있음.
- 공여국 외무장관들은 오는 2010년 3월에 뉴욕 UN 본부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아이티 재건복구 계획을 논의할 예정임.
- IMF는 아이티의 지속가능한 경제 재건을 위해 약 9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Oxfam도 국제사회에 아이티의 부채탕감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함.
- 아이티 지진 이후 몇몇 양자 간 채권국이 부채 탕감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부채가 중남미개발은행 등 다자기구에 대한 것이어서 채권국과 국제기구를 통해 신속한 부채탕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UN무역개발위원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1980년~2008년 사이 저소득국에서 발생한 21개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국가별 GDP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 24% 상승함.
- 대규모 자연참사는 경제난, 외채 증가, 상환 부담 가중, 향후 재해 위험 경감에 필요한 자원 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움.
- 아울러 국제사회는 재건복구 지원 시 증여(grant) 방식을 활용하여 차관(loan) 상환 부담으로 인한 부채위기 재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참가한 몬트리올 공여국 회의에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 미국에 비판적인 중남미국가들은 초대되지 않음.
- 일부에서는 국제사회의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이 국가별 이해의 각축장이 되었다며 특히 미국의 대규모 군 병력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함.⁵⁾

5) AFP 통신(1월 25일자 기사 "Haiti donors to meet in Montreal on Monday")에 따르면 이는 이탈리아의 아킬라 지진 시 긴급구호를 총괄하였던 국가보호서비스 총재인 Guido Bertolaso의 입장이며,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Bertolaso 총재의 발언 직후 즉각적으로 이는 국가차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함.

3.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 우리나라는 아이티에 대해 의약품 지원, 긴급구호대 파견 100만 달러, UN 긴급지원 요청에 대한 120만 달러 외에 재건복구 비용을 포함하여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정부는 아이티 지진 발생 직후인 1월 14일 의약품 등 긴급구호품 20만 달러, 긴급구호대 파견 80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함.
 - 1월 15일 한국국제협력단 2명,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 25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7명, 대한적십자사 1명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 35명이 1차적으로 피해현장으로 파견되었으며, 의약품 등 긴급구호품이 발송됨.
 - UN 긴급지원 요청(Flash Appeals)에 대해서는 식량, 식수 및 위생, 임시주거 및 비식품 구호품, 조정 및 지원 부문에 대해 12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는 당초보다 피해가 심각하고 추가적인 긴급구호 활동과 추후 재건복구 수요가 높을 것을 감안하여 민관합동으로 1,000만 달러를 조성하여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 1월 19일 외교부 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구호협의회가 개최되어 1,000만 달러 지원 결정에 따른 긴급구호 지원 및 중장기 복구사업에 대한 상세 지원 내역을 협의함.
 - 긴급구호에 500만 달러, 중장기 재건복구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중 긴급구호 250만 달러는 민간모금으로,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함.
 - 올해 해외긴급구호 예산으로 책정된 800만 달러 (95억 원) 중 250만 달러를 긴급구호에 활용하고 재건복구 500만 달러는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함.
 - 재건복구를 위해서는 전력 복구, 식수공급망 개선, 이동식 병원 등의 사업을 검토하기로 함.
 - 1월 19일에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소속 의사 및 간호사 15명, 국방부 응급구조사 1명,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요원 2명 등 의료지원 활동을 위해 2차 구호대를 추가로 파견함.

표 4. 우리나라 정부 아이티 긴급구호, 재건복구 지원 계획

구분	지원 규모	내역
긴급구호	20만 달러	의약품 지원
	80만 달러	1, 2차 구호대 파견
	120만 달러	UN 긴급구호요청 지원
	30만 달러	현재 잔여액
재건복구	500만 달러	전력복구, 식수공급망 개선, 이동식 병원 등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 1월 21일에는 UN의 요청에 따라 아이티의 치안유지와 재건복구를 위해 UN아이티안정화군(MINUSTAH: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에 200여명 규모의 PKO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함.⁶⁾
 - 우리나라의 PKO 군은 주로 공병 위주로 편성될 것이며 국회 동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음.
- 민간차원에서도 구호개발 시민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지 구호활동이 진행 중임.
 - 굿네이버스와 국제적인 아동권리기관인 Save the Children의 한국지부 등 국내 시민단체들은 식수, 식량, 의약품과 임시주거지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아산병원, 울산의대 등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해외긴급구조단을 파견하여 아이티 현지의 긴급의료구호활동에 참여함.
 - 국내 NGO의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들의 아이티 지진 긴급 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와 기업, NGO 간 협력을 중재하고 있음.

4. 평가와 시사점

가. 평가

- 현재 아이티의 상황은 지진으로 인한 자연적 재해(natural disaster)이면서 인위적 재해(man-made disaster)의 양상을 동시에 띠고 있음.

6) 2009년 11월 파견한 개인단위의 PKO 요원이 현재 아이티에서 활동 중임.

- 1957년에서 86년까지 이어진 뒤발리에 가문의 독재는 경제파탄과 부패, 정치 불안을 가져왔고 2006년 프레발 대통령 집권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으나 2008년 허리케인, 식량위기, 금융위기로 다시 타격을 입음.
- 해외 거주자가 보내오는 송금액(remittance)이 총 GDP 중 20% 정도를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아이티는 1인당 총 국민소득이 560달러로 중남미의 최빈국임.
- 빈곤, 사회 불평등,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여 UNDP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182개국 중 149위임.
- 이번 지진 이전에도 이미 전체 인구 중 58%가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며 교육, 보건, 식수 및 위생 등 기초 사회서비스도 열악한 상황이었음.
- 무차별적인 남벌로 산림이 전체 국토 중 2%밖에 되지 않아 토양 침식이 심하며 이는 식량난과 폭우 후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과거 아이티 식민지 종주국인 미국, 프랑스와 지역 맹주인 브라질 등은 아이티 지원을 자국 영향력 확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음.
- 미국은 카리브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이티에 1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가장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여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음.
- 프랑스도 병력, 의료진을 실은 군함을 2척 급파하고 아이티의 부채를 400만 유로 탕감해주는 등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음.
- MINUSTAH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브라질은 군수송기를 제공하였고 1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기도 함.
- 이번 아이티 지진은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발생 이전에 미리 위험에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
- 자연재해로 인한 개도국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재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재난위험관리(DRR)가 강조되고 있음.⁷⁾

7) 지난 2005년 일본 효고에서 열린 UN 재난경감국제컨퍼런스(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에서는 피해가능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국제사회에서 노력하자는 합의문(Hyogo Framework for Action)을 발표하기도 함.

- 개도국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적 대응역량이 약하고 환경파괴가 심하며, 특히 지진을 고려한 건물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선진국에 비해 더욱 피해가 심각함.
 - 벨기에의 재해역학센터(CRED: Centre for Research on Epidemiology of Disaster)에 따르면 1900년 이후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 5명 중 4명이 개도국 국민이었음.
- 아이티는 허리케인,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도시지역의 인구집중, 삼림남벌에 따른 환경파괴, 인프라의 취약성이 심하여 향후 재건복구에서 재난위험관리가 특히 중요함.
 - UN은 향후 5년간 여진이 수차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6~12월 사이 찾아오는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는 재난의 위험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아이티 환경에 적절한 재난경감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야 함.
 -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의 재난관련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수색 및 구조대를 조직하여 외부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 피해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립성을 강화해야 함.
- 아이티의 중장기적인 재건복구를 위해서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구축(building back better)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아이티 정부가 경제를 재건하고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체제, 제도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 아이티의 만성적인 무역,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작물인 커피, 사이잘삼 등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⁸⁾
 - 무역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경제 인프라,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등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통해 중장기적인 경제 자립성을 강화해야 함.
 - 아울러 아이티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적 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8) 미국의 경우 아이티 설탕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아이티에서 제조된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나.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08년 전체 ODA 8억 달러 중 2,370만 달러를 인도적 원조로 공여하여 총 ODA에서 인도적 원조 비율이 3%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인 8%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임.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확대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재해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원조 예산 확대가 불가피함.
 - 아울러 재해지원 상시기금을 마련, 유동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이번 아이티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에서 우리나라 구조대와 의료진의 활동은 현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긴급구호 전문인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음.
 - 긴급구호는 고도의 전문성과 현지상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신속히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긴급구호 전문가 양성과 전문기술품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각각 별도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인력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함.
 - 빈발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호 훈련 등 상시 대비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 긴급구호-재건복구-개발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에 대한 조사, 발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아이티의 재건복구를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한바,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2008~10년 아이티 『빈곤퇴치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서는 농업발전, 인프라구축, 교육·보건위생 및 장애인 지원, 법률체제 및 행정제도 등 거버넌스 구축을 개발 우선순위로 명시함.

- 현재 세계은행, UNDP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 후 수요조사 결과와 PRSP를 바탕으로 재건사업이 아이티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정부역량 강화에 유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현재 우리 정부가 재건복구 사업으로 검토 중인 전력 복구, 식수 공급망 개선, 이동식 병원 외에도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생계수단 구축 지원, 재난대비 훈련과 같은 소규모의 DRR 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재건 단계에서는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잃은 현지주민이 다시 생계수단을 찾고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식량, 영양, 보건 등 기초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액대부(microfinancing)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 소액대부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현장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우리나라 NGO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현지 NGO와 협력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번 아이티 지진에서도 다른 재난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 여성, 장애인, 빈곤층 등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건복구 사업 추진 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지원사업 계획, 시행, 모니터링과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권 유린, 빈곤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